

대학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대학 자치의 중요성

안상헌

충북대 철학과 교수



21 세기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낙후한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과 교육·연구 여건의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대학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개혁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대학 개혁 정책이 대학간의 경쟁력 개념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과 연구의 직접 당사자인 교수들이 대학교육 개혁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의 개혁 과정에 경쟁력 개념을 도입한 교육당국의 의도는 대학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대학에 개혁 마인드를 확산하여 대학 개혁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 도입한 경쟁력 개념은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대학교육 전반에 이기적 경쟁심을 조장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 논리에 입각한 대학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학문 분야간의 경쟁력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지성적 교양교육보다는 컴퓨터와 실용영어 같은 실용적 도구과목을 중시하고 있으며, 취업 관련성이 적은 기초과학 분야와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무리한 학과 통폐합과 학부제 도입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전공 학생수가 격감하는 전공교육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소학점인정제와 복수전공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학문 분야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교수업적평가에서도 경쟁력 개념의 도입으로 학문 분야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무시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한 외형적 실적평가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학 개혁 정책의 추진 정도를 평가하여 재정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교육당국의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말미암아, 각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이라는 개혁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재정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대학당국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기발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안은 시행되기도 전에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은 기발한 정책 입안이나 무리한 경쟁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의 개선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개념에 입각한 대학 개혁 정책은 대학 구성원을 주체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타율적 개혁’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육 개혁의 중심 주체여야 할 교수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개혁 정책은 교육과 연구의 직접 당사자인 교수들에 의해 충분히 연구 검토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의 실현을 통해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교수협의회에 대한 교육당국이나 학교당국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중인 대학 개혁 정책에도 대학 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사학에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교수협의회 강제 해체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부 사학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학당국이나 사학재단의 독단이나 전횡을 대학의 자율화로 생각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자, 대학 자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대폭 확충과 더불어 두 가지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대외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제도적 제약과 교육당국의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 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대학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대학 자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 자치는 전체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와 그 대의기구의 설치를 통해 대학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의 총의를 집약함으로써 대학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은 물론 그 동안 대학 개혁과 운영에서 소외되어 왔던 교수들이 자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자, 대학교육 개혁의 대전제이다. ■

안상현/한국의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생처장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역서), 『윤리학 강의』(역서) 등이 있고, “실증주의 논쟁의 철학적 기초”, “마르크스의 실천 개념(1), (2)”, “초기 마르크스의 실천적 유클론의 형성과정”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